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7면	"특자도 견제·감시 역할 중요해져, 의회 특례 반드시 관철"	1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견제·균형 책임 막중 … 입법·자치권 강화할 …	2
江原日報	03면	국민의힘 자치도 의원들 대통령실 찾아 현안 건의	3
강원도민일보	04면	국힘 도의원들, 대통령실 찾아 지역현안 건의	4
강원도민일보	23면	국힘 도의원 대통령실 방문	4
KBS 춘천	온라인	“견제·감시 충실”...역량 강화 숙제	5
강원도민일보	01면	46개국 평화와 번영의 하모니 퍼졌다	6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의회 출범 지방자치 역사 큰 의미”	7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2기예결위원장 선거 '이무철·지광천' 2파전 예상	7
KBS 춘천	온라인	원주 옛 드림랜드 부지 현물 출자...제2종축장 우려	8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농지 규제 완화 특례 관철돼야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유순옥.최재석 도의...	9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10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최재석(왼쪽)·유순옥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04면	신경호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발전 숙원 꼭 이룰 것"	11
江原日報	07면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에 강원도는 없다	11
강원도민일보	01면	특별광역자치단체 연대, 완전한 자치분권 견인	12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제주·세종·전북 '원팀' 더 특별한 지방시대 문 연다	13
江原日報	04면	내일 강원학생진단평가 319개 초교 실시	13
MBC 강원영동	온라인	양양공항 새 항공사 진출 초읽기[1/2]	14
江原日報	05면	"선풍기 하나로 버텨" 노인들 폭염과 사투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여성 관점 자치도 특례 담겨야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립대 통합 구성원 의견 중요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릉의 ‘34개국 하모니’, 세계 평화를 염원하다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41개 도로 확충, 정부 건설계획 반영에 총력을	20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특집 07면

"특자도 견제·감시 역할 중요해져, 의회 특례 반드시 관철"

취임 1주년 인터뷰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뒷받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권 의장은 최근 강원도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장은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특례 발굴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 및 도의원 정수 조정 작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대변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진행=박지은 정치부장

-취임 1주년 소감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다져나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만큼 이를 견제·감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입법권 강화는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량도 함께 높아졌다.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

-11대 강원도의회 출범, 1년이 지났다. 대표적인 성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을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의 동력을 최대치로 모은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해 온 숙원현안이었기 때문에 국회 표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도의회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강특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최대 위기상황이었을땐 도의원 모두가 국회로 집결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전 도민들의 열망이 결집되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단기 입법화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강원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 **강특법 개정 동력 결집 최대 성과**
> **내년 법 시행 전 조례 제·개정 최선**
> **특별법 3차 개정 특례 내실화 초점**
> **지역 균형발전·현안 해결 뒷받침**
> **도 지위·권한 상승 의회 위상 변화**
> **입법·자치권 강화 의정활동 박차**
> **의원수 확대·자치권 보장 등 필요**
> **의회 전문성 확대로 지역민의 대변**

-개정된 강원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6월 8일 시행된다.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별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위임되는 상당수의 조례가 내년 6월까지 제·개정돼야하는 상황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담당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본지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뒷받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영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구상은.

"특별법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보다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보다 내실화된 특례들을 발굴해 입법 작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역할을 하겠다. 우선,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특례 발굴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시행령과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조기 실현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별법 2차 개정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총 4개 조항은 삭제됐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전체 의원들에게 의회 특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안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500여건 이상의 조례가 증가하는 등 의회 입법활동 비중이 커지게 돼 도의회 전문성 확대가 절실하다. 특별법으로 확대된 도지사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도의회 관련 특례가 담겨야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지역민의 대변에 나서겠다. 도민이 주인인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더욱 힘쓰겠다."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만큼 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입법권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정착을 위해 의정역량을 전면 강화하겠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 한 말씀.

"강원특별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고 각종 지역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며 뒷받침에 나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2면

인터뷰 **취임 1년 맞은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일보와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강원도의 힘을 모으는 일에 도의회가 중심이 되고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1년간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냈다. 초대 강원자치도의장이 된 권혁열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인터뷰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이 높아진 만큼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역할과 위상도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무거운 책임감도 드러냈다.

"강원자치도 견제·균형 책임 막중… 입법·자치권 강화할 것"

의회-지자체간 상호견제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절실
3차 개정안 금년 국회 상정 내년 4월 이전 가결 목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특례 비롯 신규특례 발굴 주력

지역 실정 맞는 선거구 획정·도의원 정수 조정 노력
지방자치법 개정 도의원 1인 보좌관제 도입 등 추진
道 2청사 예산 편성 절차 등 미흡한 부분 개선해야

■**취임·개원 1주년 소감은**="지난해 7월1일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으로 선출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일했던 것 같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자치도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이 모든 건 '강원자치도 발전'이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11대 도의회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도했다.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했다. 강원자치도 출범은 50년 넘게 국가를 위해 묶여 있던 규제를 풀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의회가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는데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현행법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이 의회로 넘어와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3차 개정과 내년 6월8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구상은**="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차 개정 때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부처 설득과 신규 특례 발굴 시간이 부족했다. 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관련 특례와 제주특별법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신규 특례 발굴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차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례 297건을 재검토하고 고도화를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다듬어진 3차 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 4월 현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가결하는 것이 목표다. 특별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위임되는 상당수의 조례를 내년 6월까지 제·개정해야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의회 관련 특례는 2차 개정에서 불발됐다**="도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 총 4개 조항이 있었으나 시간에 쫓겨 통과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3차 개정을 위해 현재 전체 의원에게 의회 특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 사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500건 이상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입법활동 증가로 도의회 전문성 향상도 절실하다. 특별법으로 확대된 도지사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도의회 특례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겠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 조정을 통해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도 1년이 됐는데**="지난해 6월 6명, 올 1월 12명을 채용해 현재 18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다음 달 6명이 추가 채용돼 총 24명이 정책지원 활동을 한다. 도의원들은 회기 때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으로 바쁘고 비회기 때는 지역 행사에 참석해야 해 정책 이슈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최근 본회의를 주재하며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 내실 놀란다. 과거에 비해 내용이 깊고 넓어지고 있다. 도의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땀과 헌신 덕이라고 본다.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지방의회 역량이 국회 못지않게 강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을 개정, 도의원 한 명에게 1인 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한다."

■**강릉 제2청사 출범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영동·영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사안이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절차 오류라고냥 넘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개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예산 결산특별위에서 기관공통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을 대체 편성했다. 제2청사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의회가 구상하는 새로운 비전은**="입법권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의정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겠다. 의정모니터도 구성한다. 도민들이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불편 사항을 건의하게 된다. 앞서 말한 정책지원관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도 강화하겠다. 계속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소통하고 실천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려 한다. 강원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현정기자 together@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3면

국민의힘 자치도 의원들 대통령실 찾아 현안 건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면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강원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을 비롯, 국민의힘 도의원 43명 중 42명은 이날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강원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통한 지역 발전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특례, 2차 개정에 미반영된 입법과제 이야기가 오갔다. 의원들은 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조기 확충에도 관심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과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 용문~홍천 철도,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거론했다. 의원들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법률 개정에도 관심을 부탁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자치도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 달라고 했다"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대동단결해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는 약속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4면

국힘 도의원들, 대통령실 찾아 지역현안 건의

국민의힘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이 3일 대통령실을 찾아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혁열 의장, 박찬흥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건의했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 용문~홍천 철도 등 교통망 완성, 1의원 1보좌관제 등을 건의문에 담아 제출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한 강원 영동 지역주민들의 권리 확보, 교육감-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검토 등이 언급됐다. 권혁열 의장은 "아직 지방의회 독립이 완전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며 "의원보좌관제, 인구감소지역 도의원 정수 최소 2명 유지 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박찬흥 원내대표는 "건의한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지방분권 현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요청했고, 강릉 출신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등의 조율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화

▶관련사진 2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인물 23면

국힘 도의원 대통령실 방문 국민의힘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2023년 07월 03일 (월)
강원

KBS 춘천

“견제·감시 충실”…역량 강화 숙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현안 해결을 위해 숨 가쁜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권한이 더욱 커지는 만큼,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석은 49석.

이 가운데 43석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꾸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도지사 시책의 '거수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첫 발을 뗐습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으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자평합니다.

각종 현안 앞에서 협력할 땐 협력하고, 반대로 지적할 땐 확실히 지적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잘못됐을 때는 가차 없이 견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해야 되겠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의회 권한은 더욱 커지고 책임은 더 막중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도, 농지와 산림 개발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더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진 겁니다.

강원특별법 조항 곳곳에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될 정도로 의회 역할과 책임도 많아집니다.

도의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 수를 늘리고 정책지원관을 확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자치권 보장 특례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3차(개정안)에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와 함께 도의회는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문제 등을 다룰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도 가동해 해묵은 난제 해결에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1면

'평화와 번영의 하모니'를 주제로 전 세계 감동을 선사할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가 3일 강릉아레나에서 개막식을 갖고, 화려한 막을 올렸다. 김정호

46개국 평화와 번영의 하모니 퍼졌다

강릉세계합창대회

김건희 여사 등 대거 참석 눈길

'평화와 번영의 하모니'를 주제로 전 세계 감동을 선사할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3~13일)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대한 막을 올렸다.

3일 저녁 강릉세계합창대회(World Choir Games) 개막식이 개최된 강릉아레나에서는 총 46개국의 참가단들이 한 목소리로 세계 평화를 노래했다.

7000여명의 관객과 함께한 개막식에는 대회 주최단체인 귄터 티치 인터클투르 총재와 허용수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성동 국회의원,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을 비롯해 합창대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가 개막식에 방문해 전 세계에 희망 메세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김건희 여사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은 음악을 넘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라며 "합창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깊은 우정을 쌓게 할 것이다"라고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귄터 티치 인터쿨투르 총재는 "한국에서 2002년 부산에 이어 유서깊은 강릉에서 두번째로 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연제 ▶관련기사 2·3·12면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2면

"강원자치도의회 출범 지방자치 역사 큰 의미"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개원 1년을 맞은 지금부터가 또다른 시작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1956년 제1대 도의회가 개원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일해 온 의회는 무엇보다 지난달 강원자치도의회 출범이 지방자치제도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다. 도의회는 강원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섰고, 제주자치도 의회와도 교류했다. 또 강원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뿐 아니라 재정효율화·오색삭도 설치·접경지역 개발지원·폐광지역 개발지원·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 등 6개 특위를 구성·운영하며 강원자치도 정책사업을 견제하고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2년을 여는 강원자치도의회는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을 슬로건으로 활발히 움직인다. 무엇보다 도민에게 필요한 강원특별법 특례를 발굴, 내실 있게 채울 계획이다. 도정 견제와 감시를 견고히 하기 위해 도의원 교육과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의원연구회 활동도 활성화한다.

특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확한 문제 인식으로 대안을 모색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4면

도의회 2기 예결위원장 선거 '이무철·지광천' 2파전 예상

10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가 2파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무철(춘천) 의원과 지광천(평창) 의원이 위원장직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강정호 위원장이 이끌었던 1기 예결위는 지난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쳤다.

최근 구성이 완료된 2기 예결위는 문관현(태백)·임미선(비례)·박관희(춘천)·원미희(비례)·엄윤순(인제)·박호균(강릉)·이무철(춘천)·박대현(화천)·박윤미(원주)·지광천(평창)·양숙희(춘천)·이지영(비례)·이영욱(홍천)·김희철(춘천)·조성운(삼척) 의원 등 15명이 선임됐다.

이 가운데 이무철·지광천 의원이 위원장직 도전을 밝힌 상태다. 이무철 의원은 3일 "도는 세수 미확보, 막대한 부채 등으로 긴축재정 기조"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되, 미래 먹거리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광천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 예결위"라며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KBS 춘천

2023년 07월 03일 (월)
강원

원주 옛 드림랜드 부지 현물 출자...제2종축장 우려

[앵커]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원주 치악산 옛 드림랜드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했다가 개발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옛 종축장 부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옛 드림랜드 부지입니다.

놀이 시설을 갖춘 향토 동물원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경영난으로 2015년 문을 닫았습니다.

야영장과 물놀이 시설을 갖춘 천억 원 규모의 국민 여가 플랫폼 조성 등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된 채 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홍렬/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이장 : "지금까지 이뤄진 것도 없어요.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공약만 무성했지,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치만 해놨어요."]

그런데 최근, 옛 드림랜드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9월, 공사채 차환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옛 드림랜드 부지는 오토 캠핑장을 갖춘 체험형 종합 가든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약인 치유의 숲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유지 출자를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주 옛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한 뒤 개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하석균/강원도의원 : "이게 전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드림랜드 부지를) 현물 출자하게 되면 우리 구 종축장 부지의 전철을 밟는 형태가 되거든요."]

원주에 있는 강원도 소유의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잇따라 사용되면서, 도유지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대감이 조금씩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강탁균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오피니언 19면

강원포럼

농지 규제 완화 특례 관철돼야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22년 8월18일 시행된 현행 농지법은 건실한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귀농·귀촌을 위한 청년 농업인들에 이르기까지 농지 취득은 물론 농업·농촌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농지 소유 및 취득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은 지난 정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농지 투기 사건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터지자 이런 유형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부 농지위원의 횡포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2002년 폐지됐던 농지위원회 제도를 20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주된 골자다. 농지 취득의 심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원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화된 농지법은 강원 농촌을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강원 농업 인구는 2018년 15만4,000명에서 2022년엔 14만4,000명으로 4년 사이 1만명이나 감소했고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둔 시·군의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아울러 2022년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7만명으로, 전체 농업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반면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업 인구의 9.4%(1만3,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강원 농업은 빠른 속도로 늙어 가고 있다. 강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젊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유인책이 필요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있고, 2021년 기준 45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 인구는 1만3,000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도내 농지 거래량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월평균 도내 농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2021년 정점을 찍었고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후 전, 답 등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농업과 농촌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탁상 행정과 뒷북 대처의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까다로운 농지취득자격제도와 구시대적인 농지위원회 제도 부활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다. 무엇보다 농지 거래 위축은 농지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미래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 발굴 및 권한 이양 등의 입법화가 절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행 농지법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농지 소유 규제 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 전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3년 07월 03일 (월)
종합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유순옥·최재석 도의원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신중년 생활안전 업무협약 및 어르신 일자리 평가대회에 참석.

유순옥(비례). 최재석(동해)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4일 오전 10시 동해 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인물동정 13면

도의원은 4일 오전 10시 동해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인물동정 10면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신중년 생활안전 협약 및 어르신 일자리 평가대회에 참석한다.

최재석(왼쪽)·유순옥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4면

신경호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발전 숙원 꼭 이룰 것"

전교조 설문조사 '81% 부정적' 비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신경호(사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별도의 행사 없이 교육청 월례조회를 통해 '강원교육을 대한민국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같은 날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신 교육감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3일 열린 교육청 7월 월례조회에서 "지난 1년간 앞만 보고 부단히도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공약 과제의 87.5%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87.5점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날 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련, 교육특례 추가 반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교육청이란 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다"면서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교직자치 조직권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사 정원 증원 등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숙원 과제를 꼭 이루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가 공개한 설문결과 설문에 참여한 도내 교사 1755명 가운데 81.1%는 신 교육감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51%)'와 '잘못하고 있다(30.1%)'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전교조 조합원(501명) 보다 비조합원(1264명)이 더 많았다. 설문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감은 교사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여왔다"며 "학교와 학부모의 대립구도를 조장했다"라고 비판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경제 07면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에 강원도는 없다

정부 올해 66개 등 2020년 이후 전국 362개 기업 선정
한 곳도 없는 지역 강원·전남뿐… 창업 생태계 조성 시급

정부가 육성 및 선정하는 혁신 창업기업인 '예비·아기 유니콘'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62개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 도내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3년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원대상 기업 15개, 아기 유니콘 200 선정 기업 51개를 신규 선정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예비 유니콘은 111개, 아기 유니콘은 251개 등 총 362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도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아기·예비 유니콘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강원과 전남 두 곳뿐이다.

아기·예비 유니콘 선정은 국민심사제도를 통해 실제 투자회사 등이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투자 유치, 인력 수급이 원활한 수도권 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2022년 말 기준 아기 유니콘 기업의 80.0%의 주소지는 서울, 경기 등으로 예비 유니콘 기업은 83.3%가 몰렸다.

기업에 실제 투자하는 벤처투자사(VC)들이 대다수 수도권에 몰린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도내에서도 춘천 소풍벤처스 등 지역 기반 투자사들이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내 창업생태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기술기업 창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혁신성을 갖춘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84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벤처펀드를 조성했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규제 완화 등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틀은 마련된 만큼 지역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1면

특별광역자치단체 연대, 완전한 자치분권 견인

강원 제주 세종 전북 상생협약

특별법 개정·국세 이양 등 추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서 방안 논의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 및 완전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갈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국내 특별광역자치단체들이 연대 협력을 선언하고,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협력 및 특별법 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을 포함한 제주, 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지사 등과 4개 지자체 국회의원,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내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도간 연대 협력을 선언했다.

4개 지자체는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국세 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 등 4개 지자체는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구성, 관련 사무국을 설치해 협력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국내 1호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까지 모두 모인 오늘은 매우 감격스러운 날"이라며 "앞으로 4개 지자체가 연대하고 협력하면 특별법 개정 등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 모델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진정한 분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혁신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약식 이후 '지방시대 정책포럼'이 열려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실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가운데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비롯한 4개 지자체 연구원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지자체와 4개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주최·주관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했다.

이세훈·김덕형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종합 04면

강원·제주·세종·전북 '원팀' 더 특별한 지방시대 문 연다

4개 자자체 상생협력 협약식
각 정치권 자치분권 실현 다짐
여야 초월 국가균형발전 단합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별자치시·도의 공통분모를 갖게 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지자체와 각 지역 정치권이 국가균형 발전과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단합된 힘을 모으기로 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4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 및 여·야를 초월한 '원팀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지사 등을 비롯해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송기헌(원주을)·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노용호(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 의원 등 강원정치권과 제주와 세종,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앙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참석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다.

이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번 타자인 제주·세종 덕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3번 타자로 출루할 수 있게 됐다. 이젠 전북이 막강한 4번 타자로 들어서게 된다"며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를 야구에 빗대어 지역 간 상생협력을 피력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김 지사님께서 4번 타자의 책임을 강조해 주셨다. 4번 타자는 반드시 적시타를 쳐야 한다"고 화답하며 "더 특별한 지방시대가 개막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더욱 끈끈하게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연대 협력의 힘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줄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강원 국회의원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허영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출신 정운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특별자치시·도 4자 협력'은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이세훈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사회 04면

내일 강원학생진단평가 319개 초교 실시

12일에는 138개 중학교서 실시
작년 이어 두 번째… 참여율 상승
평가 대상 확대 후속 지원 강화

올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5일과 12일 강원지역 457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표 학력 향상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교육청은 5일 319개 초등학교에서, 12일 138개 중학교에서 '2023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처음 실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는 문제 출제부터 사전 평가, 후속 지원까지 체계적 준비를 거쳐 실제 학생들의 학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평가 참여율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전체 대상 학교의 60.2%가 접수했으나 올해는 89.61% 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신 교육감이 구상했던 전수 평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평가에 참여, 자체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학생 참여율은 78.28%로 학교 참여율에 다소 못 미친다. 전교생 모두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학생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초등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이며 국어, 영어(초등 4학년은 제외), 수학 등 세 과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평가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로 재편됨에 따라 중 1학년도 포함됐다.

7월 평가 이후에는 각 학생별 분석 자료가 제공된다. 맞춤형 보조교재 제공과 기초 학력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은 2학기에 보정지도 등을 받은 후 12월에 한 번 더 향상도 측정을 위한 평가를 받는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MBC 강원영동

2023년 07월 03일 (월)
강원

양양공항 새 항공사 진출 초읽기

이준호

비행기 운항이 한 달 넘게 중단된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양양~김포행 비행기를
주 10회가량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에 새로 비행기를 띄울 계획인
항공사는'하이에어'입니다.

하이에어는 울산을 거점 공항으로 삼은
소형 항공운송사업자입니다.

현재 50인승 비행기 ATR 72-500 기종 넉 대로
울산과 김포, 제주, 전남 무안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반투명 그래픽]

하이에어는 오는 26일쯤부터 양양공항에서도
50인승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로 양양~김포 노선을
주 10회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화물을 강원도로 실어 나르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강원도와 실무 협의를 마쳐
공식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다른 항공사와도
양양행 노선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원섭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복수의 (저비용) 항공사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의 운항 재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새 주인 찾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 10여 곳 가운데
실제 인수 의향서를 낸 건 2곳.

그런데 인수 금액에 이견을 보여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투자를 유치해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면
비행기 운항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 매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임재환 / 가톨릭관동대 항공경영학과 교수
"운항 중지 기간이 육십일을 초과하게 되면
일시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는 기업 매각에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불꺼진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 진출에 이어
플라이강원도 회생의 발판은 마련한 만큼,
양양공항 활성화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박민석)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사회 05면

“선풍기 하나로 버텨” 노인들 폭염과 사투

한낮 33도 치솟아 찜통더위
냉방비 부담 에어컨 언감생심
생계 위해 땡볕에도 일 나가
최근 3년 온열질환자 115명
‘60대 이상’ 52명 절반 육박

춘천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3일 서면 금산2리의 골목길. 힘겹게 걷던 김모(여·83)씨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다. 가려움증이 심해져 시내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김씨의 집까지 거리는 800m 정도. 올해 무릎 수술을 받아 다리에 힘이 없는 그는 “날이 너무 더워 기운이 쏙 빠진다”며 땀을 닦았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며 강원지역 노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노인들은 주택, 교통 환경이 열악해 폭염에 가장 취약하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6월)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15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45%(52명)였다. 지난해 60대 이상 온열질환자 21명이 발견된 장소를 보면 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건, 도로·교통시설 4건 순이었다. 주로 전신쇠약, 의식저하, 탈진, 열실신 증상을 보였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노인들은 3일 폭염도 힘겹게 버텼다.

춘천시 후평1동의 신모(82)씨는 슬레이트 지붕집에서 선풍기 한 대를 켜 놓고 있었다. 집 안팎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는 더웠다. 신씨는 “지자체가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냉방비 감당이 안 돼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류모(86·원주시 원동)씨도 에어컨이 있는 집 근처 복지관에서 반나절을 보냈다. 류씨는 “그나마 평일은 버티는데, 휴일에는 무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온열질환자

연령대	질환자수(명)
90대	2명
80대	17명
70대	19명
60대	14명
50대	19명
40대	16명
30대	12명
20대	7명
10대	6명
10대 미만	3명
계	115명

자료: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산불 피해로 24㎡(7평) 규모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지모(74·동해시 망상동)씨는 요즘 잠을 자기 힘들다. 지씨는 “밤에 문을 열어 놓아도 숨이 막힐 지경이고, 열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기도 고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기 요금 지원이 중단되고 거주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걱정된다.

생계를 위해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도 폭염 위협에 노출돼 있다. 춘천시내 중앙시장 일대에는 파라솔 아래 고령층 노점상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임모(여·75)씨는 “500㎖ 병 3개에 물을 얼려 왔는데 오전에 모두 녹았다”며 “더운 날에는 점심 반찬이 금방 상해 밥만 싸와 물에 말아 먹는다.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 지자체가 폭염 속에 전화, 방문하며 집중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2만1,665명이다.

박재호 춘천북부노인복지관장은 “전기 요금 부담 때문에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주민들도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김준겸·김오미·김인규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여성 관점 자치도 특례 담겨야

-전분야 대표성 반영 의사결정구조 강화를

타시도와 달리 고도의 지방자치 실현을 향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강원여성은 이전과 다름없이 지역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구조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기념토론회를 마련한 강원여성연대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이 자치역량을 키울 기회와 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려면 전 분야를 통틀어 취약한 여성 대표성을 법·제도적으로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할당은 물론 도시보다 농산어촌일수록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므로 여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해야 참여가 원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마을자치를 비롯해 지역과 마을에서 궂은 일을 도맡는 주체인데도 정작 주민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이장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식회의는 남성이 주류여서 필요한 시책 및 개선방안 제안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입니다.

여성의 일은 보조적이고 대표는 남성이 해야한다는 통념을 오히려 자치행정이 강화함으로써 편견을 고착한 일례로 농어가수당을 꼽았습니다. 이 수당은 농어가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 수령토록 함으로써 결국 여성을 배제하는 나쁜 결과를 불렀습니다. 대개 경영주는 남성, 공동경영주는 아내인 여성입니다. 가정에서 나눠쓰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독립성을 저해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별자치를 시작한 제주와 경남도 그리고 부여군을 비롯한 선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농업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문성이 인정된 것으로 자존감과 연계돼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 여성 관점의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여성은 본업인 농사를 비롯해 가사, 마을일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고질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각종 기술교육 및 전문적 프로그램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층 건강 검진과 인력도우미 제도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야외작업이 많으므로 생리적인 이유로 화장실은 더 가까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향한 비전에 여성이 동반하려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동시에 종전의 제도를 뛰어넘는 다양한 특례 발굴이 요청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7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국립대 통합 구성원 의견 중요

-지역 대학 성장·미래 위한 공감대 필요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1도1국립대' 모델을 제안한 강원대·강릉원주대가 예비 지정대학에 선정되면서 통합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3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학 본부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국립대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글로컬 대학 혁신기획서에 담긴 내용을 밝혔으며, 학사 구조 재구조화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생존과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양 대학이 공동으로 작성한 혁신기획서는 '강원 1도1국립대' 추진이 골자입니다. 캠퍼스별 부총장을 두고,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캠퍼스를 특성화해 각각 교육 연구 거점(춘천), 산학협력 거점(원주), 지학연 협력 거점(강릉), 지역산업 거점(삼척)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현재 6283명인 입학정원을 오는 2030년 5800명, 2040년 5000명으로 단계적 감축하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현재 44% 수준인 강원도 학생 비율을 오는 2040년 65%로 올리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관건은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실행계획서의 구성원 동의 여부입니다. 대학 본부는 과반의 구성원 동의를 얻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으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강원대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 간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진통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돌입하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탑클래스 통합학과' 계획에 따라 학과를 합치면 진통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간 10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탈락한다면 지역 국립대는 도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기에 통합이 구성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구성원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국립대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을 넘어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을 키우는 큰 그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릉의 '34개국 하모니', 세계 평화를 염원하다

문화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문화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더불어 제5의 생산요소로서 경제력의 원천이다. 강원문화의 독특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세계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 소극적인 지역성을 적극적인 개방성으로 전환하고, 의존적인 문화에서 진취적인 문화로의 발전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3일 개막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노래할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기대를 갖는 이유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품격 높은 음색으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자치도와 강릉시, 인터쿨투르가 주최하고 강릉세계합창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세계 34개국 323개팀 8,000여명의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날 오후 7시30분 강릉아레나에서 열렸던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열띤 경연 및 풍성한 공연,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막, 13일까지 열려
강원자치도 관광 지구촌 홍보 절호의 기회
자긍심 갖는 세계적 음악축제 기획에 지혜를

폐막식은 13일 오후 7시30분 소프라노 김순영과 가수 김범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강릉아레나에서 개최된다. 대회 기간 선보이는 다섯 차례의 축하콘서트 티켓은 모두 매진된 상태라고 한다. 경연은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4일 시립합창단, 7일 도립무용단, 10일 국립합창단의 축하콘서트, 5·11일은 해외합창단 공연이 오후 7시30분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각각 펼쳐진다. 특히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폴란드를 거쳐 지난 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강원자치도의 관광을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강릉시는 이 합창대회를 통해 강릉 관광을 재점검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강릉 관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선 주민이 모두 공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 세계적인 홍보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음악제를 통해 전 세계인은 강원자치도와 강릉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화'란 20세기에는 '집의 문을 여는 것'이었지만, 21세기에는 '집의 담을 허무는 것'이라 했다. 강원자치도가 세계 속에 당당히 서는 길은 과거 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이벤트도 있겠으나 세계인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예술제를 만들어 영원토록 그 생명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강원자치도 문화예술계의 저변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더 많은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렵고 힘들게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성사됐다.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 음악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3년 07월 04일 (화)
사설/칼럼 19면

도내 41개 도로 확충, 정부 건설계획 반영에 총력을

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업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건의한 신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한 1차 서류 평가에 착수했다. 1차 평가 중인 전국의 신규 노선은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8월까지 진행될 1차 서류 평가에서는 400개 노선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서류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현장 평가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200여개 사업으로 압축된다.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도·국지도는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인 데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망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올인하는 이유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는 41개 노선(5조1,734억원)을 건의했다. 1순위 후보사업은 춘천 안보~용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4차로 신설·12.6㎞), 삼척 오분~동해 대구 우회도로(4차로 신설·8.8㎞), 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4차로 신설·5.2㎞) 등이 꼽힌다. 홍천 북방~춘천 동산 국도 5호선 4차로 확장(18㎞)사업도 관심이다. 인근 산업단지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왕복 2차선에 굴곡이 심해 확장이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연계도로인 춘천 신동~동면 우회도로(8.3㎞)도 관심을 끈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강릉 옥계~홍제 국도 7호선 4차로 확장(4,705억원)이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휴가 시즌 상습 정체 구간이다.

전국 각지의 국도·국지도 노선들은 건설돼야 할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15개 노선 이상 반영을 목표로 최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사전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는 물론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철저한 공조도 필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살피면서도 지역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가동해야 할 때다.